당면 총선·대선 정세와 대안농정 의제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젊은 세대의 정치 반란, 결국 자유주의로 회귀될 수 있다

외환위기와 2007~2009년 세계경제위기의 결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를 우려하고 반대하는 의식도 높아져가고 있다.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 이상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인식 변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20, 30, 40대 젊은 세대의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성향은 기성 정치에 대한 정치적 반란이라고 할 정도다.

그동안 심화되는 양극화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시장의 힘에 압도당했다. 노동조합의 힘이나 정부 권력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거나 재분배를 통해 기층대중의 지위를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포기했다. 젊은 세대와 서민층의 지지로 탄생한 노무현 정부조차 분배를 중시하겠다고 공약했으면서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추구하는 것을 보고 대중들은 희망을 접었다. 대신 각자 좋은 대학을 나와 사회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747공약(7% 성장률, 1인당 소득 4만달러, 7위 경제대국)을 내걸었을 때 성장의 과실을 맛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한 표를 던졌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벽에 부딪혔다. 이명박 정부가 공약했던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낙수효과는 실현되지 않았다. 20대는 비싼 대학등록금으로 빚을 지고, 대학을 나와도 청년실업자가 되거나 비정규직에 취직하게 된다. 30대는 주거문제가 심각하다. 결혼해서 살 집을 사거나 전세로 얻으려면 큰 빚을 내야 하고, 월세로 얻으면 수입의 30% 이상을 월세로 내야 한다. 40대는 자녀 사교육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또 자녀들이 대학 졸업 후 취직을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노후를 위해서도 돈을 모아야 하는데 이것도 어렵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해 더 이상 빚을 내어 생활하거나 집을 사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더 이상 개인적으로는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된 20, 30, 40대의 젊은 세대는 당연히 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하게 되었다. 학교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복지 확충 요구가 거셌고, 대학등록금 대책은 취업후 상환제에서 반값 등록금으로 급속하게 발전해갔다.

이들이 복지재원을 축소시키는 부자 감세 정책을 고수하는 한나라당에 등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와 함께 증세에 미적거리는 민주당도 믿지 못한다. 최근 한겨레가 실시한 정치세력 선호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40%, 민주당 11%, 제3세력 39%, 진보정당 세력 2%로 나타났다.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고 안철수, 박원순 '혁신과 통합' 등 제3세력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 진보정당에 대한 선호는 대단히 미약하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제3세력이 중심이 되어 민주당과 통합하여 거대 야당이 출현하고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젊은 층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문제는 제3의 정치세력이 진정 진보정당이 될 수 있는가이다. 야권이 대통합된다면 민주당이 주요 구성 부분이 될 것이다. '혁신과 통합' 등 친노세력도 과거 한미FTA 찬성 등으로 볼 때 자유주의 세력이다. 민주노동당도 자주파 등 주도세력은 국민참여당 등 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통합을 통해 정치적 활로를 열어가려 한다. 이렇게 보면 제3의 정치세력은 또 다른 자유주의 정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식 보수양당 체제로 굳어지면 선진국 중에서도 복지가 대단히 미흡한 미국식 모델로 귀결될 수 있다. 미국 민주당에 대해 노동자들은 선거 때 지지하지만 집권 후에는 실망하는 양상이 반복되었다.

여기에 제대로 된 진보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주노동당은 2004년 총선에서 의석 혹보후 민중들의 생활상의 문제 해결 보다는 민주개혁 의제에 집중한 탓에 지지를 잃어갔고, 결국 2008년 분당에 이르렀다. 진보신당도 민생의제를 구체화하고 대중적 활동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진보대통합도 리더십 부족으로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서구의 경험에서 보듯이 자본의 지배에 정면으로 맞서는 진보정당의 활동은 복지 확충과 재분배도 촉진한다.

대안농정 의제

한국의 경우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소득보장적인 농업보호정책단계를 생략한 채 시장지향적 농업자립정책단계, 즉 신자유주의 농업정책단계로 옮겨갔다. 그 결과 대량의 농산물 수입과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에 비해 크게 뒤쳐지고, 식량자급률도 크게 하락하고 말았다. 유럽에서는 이미 1970년대까지 해결한 과제인 농업생산성과 농업생산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과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의 과제를 한국은 아직 미해결인 채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농업은 이렇게 이월된 목표도 달성하면서 지속가능 농업을 해나가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식량자급률 대폭 상향

한국농업 최대의 과제는 현재 25% 남짓한 식량자급률을 대폭 높이는 것이다. 이는 2008

년부터 세계적 식량위기가 빈발하고 있고, 국내 농지와 농업종사자도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량주권을 말하면서 자급률을 5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재 남한 인구가 해방 당시 2000만명에서 5000만명으로 늘어났고 국민들의 식생활 양식도 많이 달라졌으니 자급률 50% 달성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다. 식량자급률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 앞으로 생산과 소비 양 측면에서 현재의 추세 유지와 정부가 의도적으로 변화시킬 경우를 상정해 모의검토를 하는 등으로 보완돼야 할 것이다.

농산물 가격 및 농가소득 보장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농업 증산은 농지이용률을 현재의 105% 수준에서 150% 이상으로 올려야 가능할 것인데 이것은 농가소득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꿈도 꿀 수 없다. 따라서 농정 전문가와 통상법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증산유도형 농가지원정책과 WTO 농업규정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뤄낼지 깊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직불제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식량을 대량 수입하고 식량자급률이 아주 낮은 국가에 대해서는 식량자급률을 일정한 정도로 높일 때까지 국경보호와 국내 가격 지지정책에 대한 WTO 규정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격안정을 위해 과잉생산된 농산물을 저장, 가공, 폐기 등을 통해 유통에서 배제하는 유통명령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해 시행을 어렵게 한 것도 농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조치로, 농업계의 집중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대공황 당시 농산물 과잉생산과 가격 폭락에 직면해 생산 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가격 지지정책을 도입한 것은 고전적인 농업보호정책의 전형이다.

농정의 민주화와 농협개혁

농민의 농정 참여 등 농정의 민주화가 대안농정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는데 농민이 농산물 유통 가공자본과 농업자재 생산자본, 그리고 정부와 맞서는 것은 농업회의소와 같은 형식적인 틀을 마련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조직화된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지원 등에 의존하는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 우유값 결정과정에서 낙농육우협회가 큰 역할을 한 것은 그만큼 우유 생산 농민들이 강력하게 조직돼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농업보호정책이 강화된다 해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둘러싸고 농업 관련 생산, 유통 자본과 치열한 대결에서 농민의 단결력이 약하면 실속은 자본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 대형유통업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지 유통조직에 대한 납품가 인하, 과도한 판 매가 인하와 미끼상품 활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증

가하고 있다. 결국 농산물 유통개선은 생산지의 농가 협동 유통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매시장에 경매하든, 대형유통업체에 바로 공급하든 농민들의 시장교섭력이 있어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들도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진정한 농협 개혁을 통한 경제사업 대폭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 제도적 개선과 함께 영농조합법인과 농협 연합경제사업 등 밑으로부터의 농민 조직력을 강화해 농협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미 FTA에서 농업부문 삭제 내지 재협상

한·미 FTA는 현재의 내용으로는 비준해서는 안되며 재협상해야 한다. 첫째,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식량위기는 농산물 무역 자유화의 존립 근거를 부정한다. WTO 농업협상이 진행 중이던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는 세계 곡물재고가 과잉상태였지만 한·미 FTA가 타결된 2007년 이후 2008년에 세계 식량가격이 폭등했고, 2010~2011년에도 급등했다. 식량수출국에서 수출을 금지하면 식량자급률 25%로 대량 수입국인 한국으로서는 달러가 있어도 식량을 수입하지 못한다. 식량이 모자라 배급해야 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한·미 FTA 시행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충분하게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국민 전체의 삶을 불안정하게 하는 식량부족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WTO 협정에 의해 이미 시장개방이 진행 중인데 관세율을 더 빨리 내리려는 한·미 FTA의 농업부문 내용은 재협상해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가 내놓은 농업부문 보완대책은 형식만 갖췄을 뿐 실질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업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정부는 15년 동안 12조 6675억원 규모의 농업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예측했다. 이에 정부는 2007년 11월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해 농축수산업 분야에 10년간 21조1000억원 규모를 투입한다고 했다. 지난 8월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으로 추가로 1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단기적 피해보전 장치로 수입피해 보전장치 강화와 폐업지원금 지원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근본적 체질개선책은 고령농 경영이양 확대, 주업농의 소득 및 경영안정장치 확충, 농가등록 시행 및 농업법인 활성화 등이다. 축사, 과수시설, 원예시설 현대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돈을 쏟아 붓는다. 농촌활성화 지원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보완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농가소득 감소를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부분보다는 간접적인 보상을 하는 부분이 더 크다. 농업용 자재 구입비용을 보조하거나 저리 융자해주면 실질적인 혜택은 농자재를 생산하는 대기업자본에게 돌아가 버린다. 보완대책이 실시되더라도 농가소득 보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적절한 보완 대책은 소득보전특별법, 부채동결법 등의 제정으로 농가소득과 부채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에 경쟁력 확보, 농촌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 등 단·중·장기적으로 농업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말하는데 정부

가 내놓은 대책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

FTA 보완대책으로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더 많이 수출하게 될 재벌 등 이득을 보는 쪽에서 세금을 더 내서 피해를 본 농민과 자영업자에게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동안 자본 측은 계속해서 감세와 규제완화를 요구했고 그 결과 사회양극화가 심화됐다. 한·미 FTA 역시 규제완화로서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농민과 자영업자들이 정부가 말하는 산업간 이해 조정을 믿지 못하고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 비준은 충분한 한·미 FTA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처리해야 한다. 우선 작물별 농업생산 위축, 농가소득 감소 등 한·미 FTA에 따른 피해규모를 정확히 계측해야 한다. 비농업부문을 대상으로 재정 확보에 필요한 부담을 요구할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무엇보다도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 다양한 직불제 확충 등을 통한 농가소득 보장이 중요하다.